

# 서울경제

Seoul Economic Bulletin

# 4

April 2005

**| 권두칼럼 |**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공 병 호 (공병호경영연구소 소장)

**| 경제동향 |**

경기/고용/금융/부동산

**| 경제포커스 |**

서울시 청년실업 문제에 관한 소고  
박 희 역 (서울시장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 부록 |**

통계표

Seoul Economic Bulletin

# 서울경제

2005. 4

## 차 례

<b>권두칼럼</b>	3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공 병 호 (공병호경영연구소 소장)
<b>경제동향</b>	9	요 약
	10	경 기
	18	고 용
	24	금 융
	28	부동산
<b>경제포커스</b>	37	서울시 청년실업 문제에 관한 소고 박 희 석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b>부록</b>	51	통계표

##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공병호 (공병호경영연구소 소장)  
gong@gong.co.kr

서비스 분야는 특히 관치의 틀 아래에서, 평등의 구호 아래에서 결코 경쟁력을 꽃 피울 수 없는 분야이다. 설령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세상은 시장화를 향해 명렬한 속도로 나아가고 있다. 우리가 이런 추세를 정확하게 직시할 수 있다면, 교육이든 의료분야든 관광분야든 간에 좀 더 자유로운 경쟁의 장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순리이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서비스수지 적자 문제는 두고두고 한국 경제의 기반에 커다란 부담이 될 것이다.

‘10년 후, 일본’ 이란 책을 집필한 일본 종합연구소의 이사로 있는 다카하시 스스무 씨는 한 때 ‘Japan as No. 1’로 불리던 일본이 그 지위를 어떻게 잃고 말았는가에 대해서 다음의 다섯 가지 이유를 들고 있다.

첫째, 규제완화라는 자유화란 대세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국내의 규제완화에 실패하였기 때문이다.

둘째,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의 캐치업 경쟁에서 달미를 잡히고 말았다.

셋째, 최근 10여 년간 급속히 진행되어온 글로벌화에 일본 기업과 산업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편승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넷째, 정보통신혁명의 와중에서 이를 선점하지 못하고 안일하게 대처한 나머지 90년대 후반 이후에 비로소 편승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세계 도처에서 형성되기 시작한 산업 집적단지가 일본의 강력한 경쟁 상대로 등장하였기 때문이다.

이 같은 논리를 펴는 스스무 씨는 일본이 실패한 전형적인 산업의 하나로 서비스업을 들고 있다. 그나마 제조업은 어느 정도 선전하였다는 것이 스스무 씨의 자체 평가이다. 반면에 개인 생활을 풍요롭게 해주는 서비스업의 경우는 좀처럼 성장하지 못하였고, 이것이 일본 경제 전체에 커다란 고비용 요인

으로 작용하였다는 것이 그의 판단이다.

“예를 들어, 관광산업 또한 아주 유력한 산업으로 지적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에서는 활성화가 늦어지고 있다. 미국, 프랑스, 영국 등 어느 선진국을 보아도 관광수지가 적자인 나라는 없다. 모두 큰 폭의 흑자를 내고 있다. 그런데 일본만이 유일하게 적자이다.”

필자는 스스무 씨의 최근작을 읽으면서 그들의 장기 불황이란 경험에 비추어 한국을 생각하게 된다. 그래도 서비스업에 관련한 일본은 우리보다 상황이 더 낫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교육, 의료, 관광 레저 등 서비스 산업의 수준은 전반적으로 아주 낙후된 수준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오랫동안 여러 지방에서 강의를 해 온 경험을 가진 필자에게 서비스업의 경쟁력 정도는 우리나라의 유명 여행지들을 방문해보면 해가 갈수록 상황이 심각해진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곤 한다. 설악산 지역이나 경주 그리고 제주 모두 심각한 불황의 몸살을 앓고 있는데, 그 이유가 단순히 경기 사이클상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해당 지역 상인들의 고민이 있다. 그것은 많은 내국인 관광객들이 해외로 떠나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외국인 내방객들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조업의 공동화뿐만 아니라 서비스업의 공동화 현상도 우리가 직면하게 될 주요한 도전과제 가운데 하나가 되고 있다.

<소니는 왜 삼성전자와 손을 잡았나>의

저자인 다국적 컨설팅 기업, 딜로이트의 컨설턴트 김경준 씨는 제조업 공동화 이후에 뒤를 잇고 있는 서비스업의 공동화 현상에 대해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과거의 공동화는 제조업만의 문제였고, 서비스 업종의 일자리는 국경을 넘지 못한다고 생각 했었지요. 그런데 디지털 혁명으로 통신비용이 아주 낮아지고, 글로벌화로 국가 간 제도가 관행이 비슷해지는데다, 영어가 공용어화 되면서 서비스업의 양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서비스업도 일하는 사람이 어디 있건 상관없이 세계에서 가장 저렴하고 경쟁력 있는 사람과 맞붙어야 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즉 서비스업에서 일자리의 경쟁 범위가 과거 국가 단위에서 세계 단위로 넓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옳다, 그르다’ 라고 양분할 문제가 아니라, 세상이 그렇게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비스업의 공동화가 제조업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고객군 자체가 이동해 버리는 현상을 들 수 있다. 이를 테면 여행업의 경우에는 고객들이 여행지를 찾지 않고 이로 말미암아 여행지 관련 산업이 위축되면서 동시에 재투자의 여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빠져들게 되어 빈곤의 악순환이 일어나게 된다.

아주 전형적인 예로 교육 분야를 들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고급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 비즈니스는 급성장하고 있다. 세계의 대학 및 대학원 교육 시장의 규모는 매년 7% 정도로 성장하고 있는데, 2000년에 160

만명 정도에 달하였던 유학생 수가 2003년에는 200만명 수준에 이를 정도로 그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2003년을 기준으로 전 세계 1억명의 대학생 가운데 약 2%인 200만명 정도가 해외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된다. 연간 수업료만 약 3백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유학생 추세 및 그 비용에 관한 최근 보고서는 2월 6일, 한국무역협회 산하 무역연구소가 펴낸 ‘한국의 교육서비스 수지 현황 분석 보고서’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유학이나 어학 연수를 떠난 인원은 2001년의 27만 8천명에서 2004년 39만 4천명에 달할 정도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그리고 그 비용도 2001년에는 37억 1천만 달러에 머물렀지만 2004년에는 51억 5천만 달러로 늘어났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수치는 2003년의 46억 6천만 달러에 비해서 한 해 동안 10.5%가 늘어난 것을 뜻한다. 하지만 이 통계 자료에는 고교생 이하의 조기 유학생은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최근의 조기 유학 추세가 늘어나고 있는 점과 공식적으로 추계된 숫자만 해도 연 인원 1만명 정도임을 고려하면 50억 달러를 훨씬 상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상황을 외국과 비교해 보기를 원한다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에 발표한 ‘서비스 무역수지 분석 보고서’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2002년에 우리나라의 교육수지 적자는 42억 6천만 달러로 OECD 국가 중 적자폭이 제일 큰 것으로 드러난 바가 있다. 물론 교육수지 흑자국 가

운데 1등의 자리는 영어권인 미국으로 103억 달러 정도를 올리고 있는 실정이다.

작년 한 해 우리 경제는 내수 부진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선전을 한 한 해였다. 덕분에 작년의 경상수지 흑자 276억 가운데 해외유학비용을 포함해서 여행과 유학, 로열티, 운수 서비스 등으로 구성되는 서비스 수지 적자 규모는 87억 7천만 달러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도달하였다. 그런데 이 같은 서비스 수지는 현재 추세대로라면 개선될 기미는커녕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는데 우리의 고민이 있다.

99년에 불과 6억 5천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던 서비스 적자 규모는 2000년에 28억 5천만 달러의 적자를, 2001년과 2002년에는 각각 38억 달러와 82억 달러의 적자를, 그리고 2003년에는 74억 2천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한 바가 있다.

제조업으로 벌어져 서비스 적자를 메우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우선 적자 폭이 가장 높은 분야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원인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로열티나 운수 서비스와 같은 부분은 제조업의 성장과 더불어서 동반 성장이 불가피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외에 단일 요소로 가장 큰 적자폭을 기록하는 분야는 교육, 여행 그리고 의료 서비스 분야를 들 수 있다.

이 같은 서비스 분야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정부가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것은 다른 정부 지출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처럼 근원

적인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을 주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경쟁력이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일까’ 라는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다. 그것은 과감한 규제완화를 통한 경쟁의 촉진에서 대안을 찾아야 한다.

여기서 우리는 심각한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교육 분야만 하더라도 여러 이해집단들의 이익이 난마처럼 걸려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웬만한 신념과 각오를 갖지 않고서는 자유주의적 개혁을 행동에 옮기기 어렵기 때문이다.

적시에 올바른 변화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 <10년 후, 한국>에서 나는 교육 분야를 예로 들어, 이렇게 말한 바 있다. “교육개혁은 관련 부처와 이익단체로부터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테고, 공교육의 개선과 교육 평준화라는 기치 아래 점점 더 많은 재원이 투입될 것이다. 평등 지향적 교육이 지속되는 한 이 땅을 떠나는 아이들을 막을 수 있는 길은 없다. 결국 그런 교육의 최대 피해자는 떠날 수 있을 만큼 여유롭지 못한 이들의 자녀가 될 것이다.”

서비스 분야는 특히 관치의 틀 아래에서, 평등의 구호 아래에서 결코 경쟁력을 꽃 피울 수 없는 분야이다. 설령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세상은 시장화를 향해 명렬한 속도로 나아가고 있다. 우리가 이런 추세를 정확하게 직시할 수 있다면, 교육이든 의료분야든 관광분야든 간에 좀 더 자유로운 경쟁의 장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순

리이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서비스수지 적자 문제는 두고두고 한국 경제의 기반에 커다란 부담이 될 것이다. **SDI**